

EU 집행위, 에너지-기후변화 장기정책방향 제안

1. EU 집행위는 2006.1.10 "유럽의 에너지정책(Energy Policy for Europe)"이라는 에너지 및 기후변화 정책에 관한 통합정책패키지를 제안하면서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장기적인 정책방향을 제안하였음.

- 동 제안은 유럽연합의 에너지 정책과 관련하여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급의 안정성(security), 경쟁력확보(competitiveness) 등 3가지 정책목표 달성을 도모하고 있음.

2. 기후변화 관련 정책방향

가. 목표

- 지구 평균기온을 산업화 이전수준에서 2°C 이내로 억제함.
-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EU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최소한 20% 감축하고, 여타 선진국들의 동참이 있을 경우에는 30%까지 감축함.
 - 2050년까지 지구적인 온실가스 감축량은 1990년 대비 50%수준으로 유지하고, 이를 위하여 선진국은 기준년도 대비 60~80% 수준을 감축함.

나. 수단

- 에너지 정책
 - 에너지 효율을 2020년까지 20% 향상함.
 - 2020년까지 에너지 구성중 재생가능에너지(renewable energy) 비율을 향상시킴(구체적 비율 미정)
 - 2015년까지 유럽내 12개소의 대규모 시범시설을 건설하는 등 탄소포집 및

저장 정책을 채택함.

○ 유럽연합 온실가스배출권 거래제(EU ETS)

- 현재 유럽 이산화탄소의 45%를 점하는 EU ETS 점유율을 2013년이후 더욱 제고함.
- 할당기간을 5년보다 길게하여 장기적투자결정을 위한 예측가능성을 높여줌.
- 이산화탄소 이외의 온실가스 및 여타부문으로 대상범위를 확대함.-
- 탄소포집 및 저장을 고려함.
- 할당시 유상화비율을 확대하고, 회원국간 할당절차를 조화시켜 공정한 경쟁을 도모함.
- EU ETS를 캘리포니아나 호주 등 유사한 강제적 프로그램과 연계함.

○ 교통부문

- 항공부문의 EU ETS 편입을 추진함.
- 이산화탄소 배출정도에 따른 승용차 세제의 도입을 추진함.
- 자동차로부터의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하여 2012년까지 120g CO₂/km 달성방안을 강구함.
- 이산화탄소 배출억제를 위한 수요관리적 정책을 추진함.

○ 국제적 접근

- 선진국에 대하여는 2020년까지 1990년 대비 30% 온실가스 감축을 제안함.
- 향후 개도국의 온실가스 배출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상당한 노력이 요구됨.
 - ※ 선진국의 수준에 육박한 개도국의 경우 발전정도, 1인당 배출량, 잠재적 감축가능성, 기술적·재정적 능력에 따른 감축조치를 기대함.

○ 기타

- 건물의 에너지 사용을 30% 줄이도록 함.

- 이산화탄소외 온실가스 저감을 위하여 농업·산림정책 수단을 활용하고, EU ETS에 메탄·질소산화물을 포함하고, 불소화가스 사용억제정책을 추진함.
- (청정)에너지 관련 R&D를 확대함.

3. 관찰 및 평가

- 이번 제안은 법률적 구속력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향후 구주의 회 및 이사회에 의한 추진절차를 거칠 경우 EU의 에너지정책 및 기후변화정책 추진의 근본적인 기초를 형성할 것으로 전망됨.
- 당지 소재 일부 환경단체들로부터 EU측의 온실가스 저감목표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없는 것은 아니나, 교토의정서상의 감축목표가 기준년도 대비 8% 감축이었던 점에 비추어 2020년까지 최소 20% 내지 30%까지 감축하겠다는 목표는 기후변화에 있어 EU측이 세계적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수행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로 풀이됨.
- 아울러 이번 제안에는 미국, 호주 등 교토의정서를 비준하지 않은 여타 선진국에 대한 감축노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개도국에 대하여도 응분의 역할을 기대하는 등 종래보다 명시적이고 공세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특히 아직까지 기후변화체제상 개도국으로 분류되어 있는 우리나라와 같은 나라에 대하여 “선진국 수준에 육박한 개도국(countries that reach a level of development similar to that of developed countries)” 이란 별도의 범주를 명시하여 국가발전정도에 상응한 역할을 기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바, 향후 국제무대에서 EU측으로부터 우리나라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압력이 점차 강화될 것으로 전망됨.
- 이번 제안에서 EU는 EU ETS와 관련하여 할당기간 연장(5년 이상), 유상화비율 확대, 대상 온실가스 및 대상부문 확대, 국제적인 연계강화 등의 조치를 지향함으로써 시장에 장기적인 전망과 예측가능성을 보장하여 EU ETS를 한층 공고히 하고 나아가 궁극적으로 세계적인 탄소시장 구축에 EU가 선도적

인 역할을 수행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